

주간 변화와 소통

홈페이지: kttu.or.kr

트위터: twitter.com/kttu_kr

10월 단통법 시행, 뭐가 달라지나

동일 단말기=동일 보조금 원칙, 시장 고착화 우려도 제기

핫이슈 - 5월 2일 단통법 국회 통과



그 동안은 똑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100만원 제값을 다 주고 산 경우와 50만원이나 심지어 10만원대에 구입하는 ‘비정상적 소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역, 시기,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로 지급되던 보조금이 일정해지고, 공짜폰을 앞세우던 휴대폰 유통점들의 판매방식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5월 2일(금)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단통법의 주요 골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차별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체결 금지 등이다.

일단 시장의 첫 반응은 긍정적이다. 단통법이 본격 시행되는 10월 1일 이후 통신사들의 경쟁이 보다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하향 안정화돼 서비스와 품질, 요금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공짜폰을 사라지게 하는 단통법이 소비자편향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이통 업계에서는 점유율 고착화 문제를 우려하며, 3사 동시

영업이 재개되는 5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단통법 시행 전 한바탕 불법보조금 쟁탈전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기도 한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에 대해 살펴본다.



▲ 지난해 12월 정부는 이통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간담회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의지를 피력했다.

1. 불법보조금 추격전에 제동

불법보조금 문제는 이동통신시장의 최고 난제 중 하나다. 똑 같은 휴대폰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이 문제였다. 이통 3사는 올해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새해를 맞았고, 현재 서로를 감시하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중이다. 모두 불법보조금 때문이다.

불법보조금이란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값비싼 스마트폰을 공짜로 판매하는 등 시장질서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와 정치권이 나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 제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다.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과도한 이용자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가 전문가와 함께 ‘단말기유통구조개선TF’를 통해 내놓은 제도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보조금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정부와 통신시장의 고질적 관심거리였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어떤 지점에서든 동일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고가의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유도 행위도 금지돼 취지대로라면 요금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에서 줄인 비용을 멤버십 서비스나 요금할인 등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시장위축의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후발사업자들의 진입이 힘들고, 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20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 이전까지 한바탕 시장과열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도 일제히 내려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당초 예상인 8조 80억원보다 무려 13% 하락한 6조9300억원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문제는 단통법의 시작 전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 판매장려금 관리부터 보조금 공시까지 규제의 강도가 한층 강해지기 때문에 저마다 그 전에 시장의 판도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통신업계의 불법 보조금 추격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주요 내용

이미지:한국일보

이통사 및 제조사 보조금 규제	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 위반시 매출 3%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3억원 이하 벌금
보조금 지급액 공시	휴대폰 출고가와 보조금, 실 판매가를 홈페이지에 공시 위반시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대형 유통업체도 제재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이용자가 기존 휴대폰 사용자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보조금 지급시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이통사의 판매점 관리책임 부과	이통사의 판매점 관리감독 책임 부과
공짜폰 상술 금지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포장하는 행위 금지

2. 단말기값, 앞으로는 알기 쉽게 공시해야

단통법이 시행되면 27만원으로 규정된 현행 법과 달리 단말기 별로 보조금을 구분하며 사업자들은 보조금을 알기 쉽도록 공시해야 한다.

우선 기존에는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위법으로 보았으나 단통법은 가입유형,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했다.

이통사는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보조금 지급 수준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또,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단통법은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수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형 유통점의 경우에는 일반 유통점보다 강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3. 3만원대 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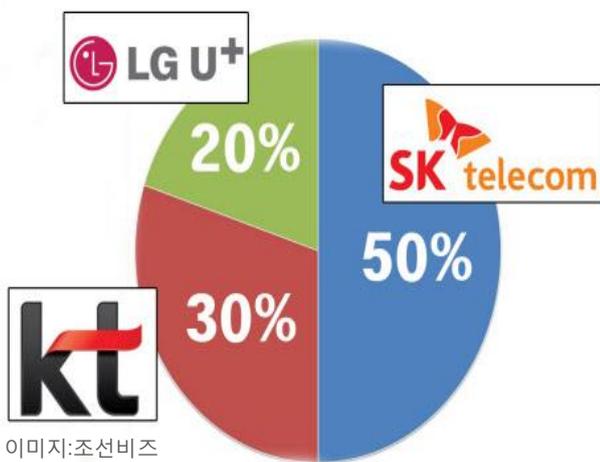
단통법이 시행되면 현재 6만원대 이상 요금제에 집중적으로 제공되던 보조금이 3만원대 저가 요금제에도 제공될 전망이다.

5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통법 세부사항 논의 과정에서 보조금이 고가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쏠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거론됐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게 돼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고가 요금제 사용자와 저가 요금제 사용자에게서 얻는 수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더 많은 보조금을 실어주는 것은 정당하다는 해석이 따랐다.

또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과 같이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주는 것은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통사는 경쟁사에서 넘어오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자사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 고객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줬는데 이를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4. 공짜폰 사라지고, 점유율 고착화 우려도

이동통신 사업자가 같은 스마트폰을 한 쪽에는 10만원에 팔고, 다른 쪽에는 20만원에 판매했을 경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금지한 고객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단통법은 이 경우 똑같이 20만원을 받게 한다.

자칫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단통법이 시장 안정화와 고객차별 금지에 초점이 맞춰 있어 소비자편에서 보면 오히려 편익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며, “단말기 출고가 하락 및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조금 경쟁을 안정화하면서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하고, 이어 요금인하 및 서비스 향상 경쟁이 나타날 것이라 강조한다. 또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요금인하 및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는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다.

5. 5월 시행령 확정해 6월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현재 10월부터 시행하는 단통법에 대한 하위 세부 시행령과 고시 등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과 고시 등을 5월 안에 확정지어 6월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인 방통위가 고시하는 보조금 상한액 논의도 시작됐다. 정률제와 정액제 등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이며, 최소한 현재 27만원보다는 높은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2010년, 3G 피쳐폰 시절 책정된 가이드라인인 현행 27만원 상한액보다는 더욱 확대시킨다는 뜻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액제 방식으로는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정률제는 제조사들이 이통사와 손잡고 더 많은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출고가를 올리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 통신판매업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보조금 상한액에 대한 1차적인 논의도 5월 중 마친다는 방침이다.

10월 1일 단통법이 당초의 긍정적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까지는 무수한 논란과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